

한·미 FTA 4차 협상 결과

농산물 분야, 통합협정문을 작성 및 특별세이프가드 도입하는데 원칙적 합의
5차 협상 12월 4일 미국서 진행, 6차 협상은 한국서

한·미 FTA 4차 협상이 지난 10월 27일 종료됐다. 김종훈 한국 협상단 수석대표는 27일 오후 7시 브리핑을 갖고 협상 내용을 보고하며,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F
T
A

김종훈 수석대표는 “금번 협상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그간 확인된 양측간 이견을 좁혀나가고, 특히 공산품을 중심으로 향후 관세양허안 타협의 골격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하며, “금번 협상 결과 상품양허안의 불균형이 일정수준 해소되어 소기의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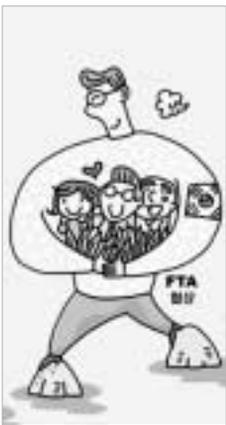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에 대해서는 “지난 2차 협상 이후 진행해온 양측 유보안의 명료화 작업을 완료하고 실질적으로 유보가 필요한 분야를 가려내어, 앞으로 협상의 가속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정문 협상에서도 핵심쟁점을 제외한 내용에 대한 가치치기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원산지, 통관절차, 투자, 통신,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등 분야에서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통합협정문을 작성하고, 특별세이프가드를 도입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비민감품목을 중심으로 50여 개 농산물의 개방시기를 앞당기는 개선된 양허안을 제출했지만 미국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한국 측의 농산물 양허개선안은 138개 품목이 포함된 8,800만 달러 규모지만 미국의 섬유분야(13억5천만달러) 개선안과 공산품분야(15억달러) 개선안에 비하면 미흡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5차 협상에서 미국측은 농산물 개방을 강도 높게 요구할 것으



로 전망된다.

제5차 협상은 오는 12월 4일~8일 간 미국에서 개최하며, 6차 협상은 1월 중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한·미 양국 수석대표들의 이날 브리핑 내용과 협상기간 동안 협상장 안팎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미 FTA 4차 협상 중 농산물 분야의 결과와 위생검역(SPS) 분야를 정리한 것이다.

〈농산물 분야 협상 결과〉

요 약

- 양측은 농업 분야 통합협정문 작성에 합의
 - 우리측 요구사항인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하고, 세부 내용은 지속 협의 예정
- 우리측은 미측에 수정 양허안을 전달
 - 미측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추가 양허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우리 측은 10월 25일 원피, 토마토, 상추 등 관세철폐 이행기간 '기타(관세철폐 제외 포함)' 단계에 있던 284개 농산물 가운데 50여 개를 관세철폐 '10년 이내'와 '15년 이내' 단계로 옮긴 수정 양허안을 제시했으나, 미국 측은 우리 측의 수정 양허안에 대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미국 측이 농업 분야에서 원하는 내용을 담은

'요구 목록(request list)'을 별도로 제시해 축산물(쇠고기 포함), 채소, 과일 등 농산물 대부분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쌀은 '아직까지는' 미국 측 요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국 협상단은 특별 세이프가드의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이밖에 농산물 수확기에만 수입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는 '계절관세 제도'의 도입에도 합의했다.

〈위생검역(SPS) 분야〉

위생검역 분야에서는 개별 위생검역 사안에 대한 협의체로 접촉점(컨택 포인트)을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우리 측 주장과 상설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미국 측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한·미 FTA 5차 협상이후 쟁점〉

분 야	쟁점 사항
농산물	쌀, 쇠고기 등 민감품목 개방 여부
자동차	미국의 자동차 관세 철폐 vs 한국의 배기량 기준 세제
섬유	미국의 섬유 개방폭 확대 여부
무역구제	미국의 반덤핑 발동요건 완화 등
서비스	방통융합서비스·통신·방송·택배 등 11개 분야 개방 여부
금융서비스	우체국보험과 산업은행 특혜 폐지 여부
방송·통신	기간·통신·외국인 지분제한 확대, 케이블 방송의 지분제한 확대 등
의약품·의료기기	미국, 신약 특허권 강화 vs 한국, 의약품 제조시설기준(GMP) 상호 인증

- 출처 : 국정홍보처, 민중언론, 프레시안